

# 전남 도민들 “농어촌 소외, 인구·인프라 도시쏠림 걱정” 광주 시민들 “세금 부담 증가, 출산·육아혜택 축소 우려”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청회에서 전남 도민들은 농어촌 소외와 도시로의 인구·인프라 쓸림 우려를 쏟아냈다.

광주 시민들은 자치구 권한, 교육 자치 등에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행정비용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과 전남과 다른 출산·육아 등 복지 정책 혜택 축소 등을 걱정했다.

전남도는 19일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남 22개 시군, 광주 5개 자치구 등 권역별 공청회의 첫 시작이었다.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통합 이후 전남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가 광주로 쓸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장 많이 제기했다.

삼호읍 주민 신양심씨는 “역사적으로 행정통합이 규모가 작은 지역이 힘들었던 걸로 미뤄보면 광주 중심의 통합이 헛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체 70%를 차지하는 임차농의 구체적인 생존권 보장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부 겸 목사인 정태종씨는 “순천시와 통합된 승주는 소멸위험지역임에도 농어촌 혜택을 받지 못해 인구가 1만 2,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소규모 지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법에 농촌예산 배정 등을 명시해 법제화해 달리”고 요청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나주 혁신 도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영암지역 유치 방안’, ‘중대한 자치단체 통합인 만큼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광주 동구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대통합 동구 권역 시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시·도, 행정통합 첫 공청회 무얼 묻고 답했나

### 농촌예산 법제화·주민투표 요구 복지격차 대책·재정 안정 주문

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시기를 놓치면 영영 기회를 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김효진 학부모연합 회장이 “광주의 교육 인프라가 전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 공동학군제를 이미 제안해둔 상태에서 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 인프라도 구축해둔 상황”이라며 “통합이 이뤄지면 광주와 전남의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상 행정 통합은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

과 관련한 조문이 4~5개 포함됐지만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한시적 재정 지원 방안만 제시한 점도 도마에 올랐고, 특별법 초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청회를 강행, 낙관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광주지역 첫 공청회에서 이양섭 동구통장 협의회장은 “통합으로 인해 광주지역의 복지 수준이 낮아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격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주민 김용임씨는 “통합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재정 독립이 필수적인데, 중앙 정부의 교부세나 특별회계 등 단기적 자금만으로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 특별시가 교부받는 세수 중 일정 비율을 기초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구 단위의 보조금 지원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구와 군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근거를 통합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며 “전남도와 일부 이전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광주 입장에서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장은 “통합은 현 상황 유지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장점을 상호 확산시키는 분야별 ‘상향 평준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며 “국가 재정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 수준을 높이고, 농촌 지역은 맞춤형 지원을, 광주 도심은 농촌 특례 등을 활용해 취약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흥승현·이수민 기자

##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을”

### 역사·정체성 주장 쟁점 부상 통합 대응 TF도 구성·운영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19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통합이라 는 가시적 측면뿐 아니라 역사성·정체성·상징성을 함께 담아내는 문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회는 “전라도의 역사성과 전남·광주 통합의 균형을 고려할 때 명칭에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또 행정통합 논의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김태균 의장이, 부단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이 맡는다.

도의회는 TF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청사와 의회청사 등 쟁점 사항과 보완 과제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로 전환, 보다 심층적이고 공식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전남도와 행정통합에 따른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근산 기자

## 나광국 도의원 “시도 통합, 행정수도는 전남으로”

### 특별시장 근무지 도청 주장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전남은 행정수도로 삼아 시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의 행정청사와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반드시 현재 전남도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이미 시작된 시대적 흐름이며 이제는 ‘어떤 구조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통합은 기준 합

의를 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과 기능의 분산이 필수적이며, 통합 이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통합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며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대학, 연구기관, 문

화, 의료 등 인프라가 이미 축적돼 있는 반면, 전남은 농수산, 에너지, 산업단지, 국토관리 등 광역행정을 책임지는 22개 시군과 다수의 공공기관을 아우르고 있다”며 “따라서 행정의 중심은 호남을 대표하는 전남이 맡아야 하며, 2026년 7월 1일 취임할 초대 특별시장의 첫 업무는 현재 전남도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통합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돼야 훈련과 갈등 없이 통합이 안착될 수 있다”며 “그것이 지방분권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통합 모델이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 상무지구 FUNIS

###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Floor Plan**

**3F SCREEN GOLF**  
풀격늘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ZONE PARK 시스템 스크린볼 12홀과 부대시설

**2F SCREEN GOLF**  
풀격늘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ZONE PARK 시스템 스크린볼 11홀과 부대시설

**1F Fun it, us 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세미온 공간

**B1 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인석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연화로 192(시평동) 구. 상무리초전번선웨딩